

장애인 자립, 시대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38년 장애인복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1. 들어가며

1988년, 내가 장애인복지 현장에 처음 발을 들였을 당시 우리 사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었다. 장애인은 보호와 시혜의 대상이었고, 사회참여나 경제활동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장애인이 취업한다는 것은 개인의 의지로만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장벽이 너무나 높았던 시대였다.

그 시절 내가 근무했던 장애인시설에서는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직업기술교육, 특히 재단·봉재 기술을 교육 훈련 시켰고 스스로 밥을 짓고 자신의 방을 관리하며 규모의 경제로 지역사회에서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등 장애인들이 기술 습득 후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였다. 기술을 익히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지만, 더 큰 문제는 취업 이후였다. 봉재회사에서의 노동 환경은 장애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녹록지 않았고, 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취업을 연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통해 직장 에 적응하고 이겨내고 버틸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데도 힘을 보탰다. 동시에 일반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의 근면 성실한 면과 장애의 불편 함에도 의지가 굳어 최선을 다하는 장점들을 바탕으로 장애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 하였다.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취업 지원 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장애인의 자립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사회적 수용과 구조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였 다.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시도이기도 했다.

필자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38년 동안 장애인복지 현장을 지켜왔다. 그 시간은 단순한 변화의 축적이 아니라 '보호 중심에서 자립 중심으로'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이었다.

2. 시대 변화와 장애인 자립에 대한 인식 전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장애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립'은 선택이 아닌 기본적인 삶의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장애인고용촉진 정책, 장애인차별금지법, 활동지원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애인의 삶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아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다. 더 이상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만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에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면, 이제는 '장애인이 하고 싶은 삶'을 지원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서비스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의 문제이며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는 장애인 자립 환경을 크게 바꾸었다.

1) 권리 중심 복지로의 전환

장애인복지는 시혜적 복지에서 권리 기반 복지로 변화하였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선택권, 사회참여권이 강조되며 자립생활이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2)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확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동하고 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

3) 서비스 다양화 및 전문화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되며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는 '중증장애인이자 할지라도 자립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며, 장애 당사자의 처지에서도 자신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3.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의 현실과 한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히 취업이나 소득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경제적 자립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자립의 전부는 아니다. 진정한 자립이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존엄성

즉, 자립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과거에는 시설 보호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며 필요한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이상과 거리가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은 크게 두 가지 대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 → 자립 지원 중심
- 최중증 및 발달장애인 → 보호 및 인권 중심

문제는 두 번째 영역이다. 최중증장애인과 전적인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자립이 어려운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우와 한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에 대해서도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주요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획일적인 자립 기준

자립을 경제적 독립이나 단독 거주로만 요구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2) 서비스 연계 한계

시설 → 지역사회 → 자립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시설이 지역적으로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3) 인력구조 한계

개별화된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인력이 요구되지만, 현장의 인력 구성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4) 가족 및 지역사회 부담

중증장애인의 자립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가족의 회피, 지역사회의 님비(nimby)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

4. 자립의 재정의 - '홀로 독립'이 아닌 '의미 있는 삶'

한때는 중증장애인이 자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지원체계와 서비스가 구축되면서 충분히 가능한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주거지원, 직업재활, 맞춤형 서비스 등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조공학기기와 정보기술의 발전은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다.

-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의 불균형
- 사회적 편견과 차별
- 가족에게 집중되는 돌봄 부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립은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립은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의 장애인 자립은 기존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자립이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립은 다음과 같이 확장되어야 한다.

- 부분적 자립 (지원과 함께하는 자립)
- 관계 속 자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삶)
- 기능 중심이 아닌 삶의 질 중심 자립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홀로 자립'이 아니라 '지원 기반 자립(Supported Independence)'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5. 최종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 지원 방향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일하며 느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장애인은 기회를 통해 성장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용인이, 적절한 지원과 경험을 통해 스스로 일을 하고, 사회 속에서 역할을 찾아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이었다.

또한 직원의 전문성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용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확장 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용인의 삶과 직원의 전문성이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장애인의 자립은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들을 어떻게 자립으로 이끌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 현장에서의 노력과 방향은 다음과 같이 지속되어야 한다.

1)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ISP) 강화

모든 장애인은 서로 다른 욕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립 지원은 반드시 개인별로 설계되어야 한다.

- 개인의 기능 수준, 욕구, 환경 분석
- 단계별 목표 설정
- 지속적인 평가 및 수정

특히 '연결-경험-성장'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연결 :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 경험 : 다양한 활동 참여
- 성장 : 자기결정과 역할 확대

2) 일상생활 중심 자립 훈련 확대

자립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일상에서 시작된다.

- 식사 준비
- 금전 관리
- 대중교통 이용
-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이러한 일상생활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지원주거 및 자활꿈터 확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이 중요하다.

- 지원주거(지원인력 상주 또는 순회 지원)
- 소규모 자활꿈터 운영
- 지역사회 내 분산형 거주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4) 직업 활동의 다양화

기존의 단순노동 중심 직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 보호 작업 → 참여형 활동 → 사회적 역할 확대
- 맞춤형 직무 개발
-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구축

자립은 시설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 지자체
- 복지기관
- 의료기관
- 주민 조직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6) 종사자의 역할 변화

앞으로 종사자는 일상을 지원하고 돕는 보호자가 아니라 '자립을 설계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 코디네이터 역할
- 사례관리 중심 접근
- 권리옹호자 역할 강화

6. 앞으로의 과제

앞으로 장애인복지는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1) 연결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절된 환경이 아니라, 일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2) 경험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직업, 문화, 여가,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이 축적될 때 자립의 기반이 형성된다.

3) 성장

보호를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의 삶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방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되어야 한다. 장애인 자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 자립의 개념 재정립
- 최중증장애인 자립모델 개발
-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 강화
- 정책적·재정적 지원 확대

특히 정책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7. 맺음말 - 38년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

1988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의 현장에서 수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장애인의 삶이 있었다. 과거에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면, 이제는 사회가 장애인의 삶을 지원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립'이라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다.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이며,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지난 38년 동안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일하며 느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장애인은 변화할 수 있고, 사회는 더 크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취업 자체가 기적이었다. 지금은 자립이 당연한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는 더 어렵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한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와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장애인의 자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앞으로 장애인복지는 '돌봄'이 아니라 '삶을 확장하는 플랫폼'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연결' "경험" "성장"이라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2026년 5월

전북장애인복지시설 협회장 조종환